

민민의 자치와 참여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조성혜

기억

1980년대 초반, 뜻있는 대학생들(운동권 학생) 사이에서 격정적으로 일어났던 논쟁이 있었다. '학생운동의 임무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쟁으로 소위 'UP' (지하유인물)를 통하여 은밀하고도 광범위하게 전개된 바 있다. 이는 곧 노동운동의 진로와 관련한 논쟁으로, 나아가 한국 사회의 성격과 변혁적 전망(소위 '사회구성체론')에 대한 논쟁으로 심화되고 발전되어 갔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학생운동의 임무에 대하여 대별된 두 입장이 있었는데, 한 입장의 주요 논지는 기층 대중운동역량이 저급한 현실에서 학생운동은 선도적 민주화투쟁을 통하여 대중운동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는 논지였고, 다른 하나의 입장은 학생운동가들의 주요 임무는 현장으로 들어가 기층 대중운동역량을 조직하는 데 투신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기억하기도 오래된, 해묵은 논쟁의 역사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어떤 입장이 옳았던가를 판가름하기 위함이 아니다. 당시의 주요 논쟁가들의 삶의 궤적과 현재의 근황이 궁금해서도 아니다. 한때의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하기 위함도 아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진한 열정이 그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계급적 자각과 역사적 책임감, 사회적 연대

의식, 헌신적 실천의지 등 기억의 저편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소중하고 진지한 그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운과 움직임이 펄떡거리고 꿈틀거렸기에 군부독재체제는 엄중한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이 땅의 민주, 통일, 자주, 민중생존권 쟁취의 외침은 정당성을 성취한 것이다. 역사의 개혁과 진보를 향한 신선하고도 푸르른 생명력이 충만했던 '그때'가 있었기에, '역사의 오늘'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미래를 올바르게 예측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한 또렷한 기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역사에 대한 망각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절실한 요즈음이다. 남한 사회의 민주화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해 온 것이 아니다. 자연적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연히 얻어진 산물이 결코 아니다. 군사정권에 의한 모진 탄압과 회유, 감시, 고문, 투옥, 해고 등 가시밭길을 온몸으로 부딪쳐 오며 투쟁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 '똥물'을 맞아가면서 '뎀뎀'으로 당차게 덤벼든 여성 노동자들의 존엄한 항거로부터 도서관 난간에 밧줄을 매고 '군부독재 타도'를 외친 학생들의 민주화투쟁, 산업 노동자들의 우렁찬 함성들과 진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선 무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현실 1

우리 사회가 이미 '민주화 단계의 공고화' 과정으로 들어섰다는 평가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져 오는 정권들의 자기 성격 규정을 통하여 드러날 정도이다. 특히 200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개혁적 색채를 가진 열린우리당이 보수적 색채를 띤 한나라당에 대하여 절대 우위의 의석을 확보한 점 역시 '민주화 단계의 공고화' 과정을 대변하는 하나의 표상이다. 이 선거에 더

옥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총과 전농'에 기반한 진보적 색채를 띤 '민주노동당'이 당당하게 현실정치의 첫발을 성큼 내딛게 되었던 점이다. 민주노동당의 제도정치에의 진입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구성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제도정치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민중세력의 요구와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적 상황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분단 50년의 비통한 현실과 비대칭적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대 개혁 입법(과거사 진상규명,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관계법, 국가보안법 폐지)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보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 수위가 어느 정도 고양되었는지를 드러내 주고 있다. 옹고 그릇을 논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현실은 오늘의 시대를 '민주화 단계의 공고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현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과정은 역시 쉬운 길이 아닌 모양이다. 사립학교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 자체를 폐교할 수도 있다는 참으로 비교육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독과점 신문들은 지면을 통하여 독한 소리를 연일 퍼붓고 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어떤 쿠우단체의 신문광고 내용은 소름끼칠 정도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행한다면 끝장이라는 야당 대표의 극단적 발언도 있다. 한때는 '종교의 본분이 현실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권력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선포'에 있음을 선언하며, 종교인들의 비판적 역사참여에 대하여 점잖게 충고를 하던 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격양된 자세로 시청 앞 광장에서 정권 타도의 구호와 몸짓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보수의 능동화, 보수의 정치세력

화'의 단면들이다. 역사의 추는 이들에게 기우는 것일까? 아니면 역사의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더 한층 짙어진다는 문학적 수사에 머무르는 것인가?

현실 3

'먹고 살기 힘들다', '요즘 같이선 장사 못해먹겠다' 라는 하소연과 원성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이미 오래 전에 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넘어서 버렸다. 여성 노동자들의 2/3가량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의 처지는 그분들의 절망적인 얼굴 표정에서 읽을 수 있다. '청년 실업자'들이 일할 곳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6·15 공동선언'으로 성취된 이 땅의 평화공존과 민족화해의 물결은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전쟁에 우리 청년들이 파병되는 것을 막아 내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들의 일상 구석구석을 헤집어 놓고 있다. 여성과 노인, 장애인, 어린이, 이주 노동자, 성적 소수자 등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 늘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처지는 여전히 소외된 상태로 남아 있다.

고민

'민주화 단계의 공고화' 과정이 이성적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보수 세력의 처절한 기득권 지키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못매를 맞고 있는 민중들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나는 고민한다. 어디에서부터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고 가는 것이 옳은가? 무엇을 하는 것이 이 시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가? 역사의 개혁과 진보의 방향으로 우리들을 나아가게 할 지혜와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문제 해결의 왕도가 어디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답이 있다면, 해결의 원리가 있다면, 이 모든 물음들 앞에 다시금 정직하게 서는 것뿐이다. 현실로부터 제기되어 오는 제반 문제를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안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마치 80년대 초반 엄혹했던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강제와 협박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싱싱하게 용솨음치던 그 물음, 이 시대 민주화운동세력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시대적 임무로 둘 것인가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와 합의점들을 모색하기 위한 물음으로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의 계급적 위치에 대한 자각과 역사적 책임감, 사회적 연대의식, 헌신적 실천 의지가 다시금 진지하게 검토되고 성찰되어 신명나는 운동으로 표현되어야 할 때가 '지금, 여기' 이다.

전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라는 오래된 말씀이 있다. 민주화운동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고, 싹 틔우기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학원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온몸을 다 던지며 싸워 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그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민주화 과정의 공고화가 힘 있게 구축되고 나아가 민주화 과정의 심화의 단계로 우리 역사가 나아갈지, 아니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자들에 의하여 나락으로 떨어질지 선불리 예단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다. 이 일은 정치인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민민의 지혜와 민민의 힘을 모을 때만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서서히 그러나 당당히 굴러갈 것이다. 민주화운동 세력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바로 민민이 역사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민의 의식화와 조직화에 자신을 던지고자 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던가? 민주화운동의 나무는 이미 상당한 무게와 부피를 가지고 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의 기층운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는 다기다양한 모습의 가지들을 뺀어 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환경운동, 여성운동, 교육운동, 권력감시운동, 경제정의운동, 문화운동, 협동조합운동 등 일일이 셀 수 없는 크고 작은 운동들이 민주화운동이라는 큰

들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역사의 성과다. 그러나 아직 민주화운동이 그 역사적 결실을 맺었다 하기에는, 박노해가 '노동의 새벽'에서 노래하던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기에는 우리의 갈 길이 아직 남아 있다. 이 일에 참여하는 데 규격화된 정식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각자가 서 있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자기 삶의 근거지로부터 최대한의 운동성을 발휘하는 것이 민주화운동가들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의 부름일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지역, 동네)로부터 민주民主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는 일이야말로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21세기형 민주화운동이 아닐까?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말의 의미 역시 사는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가 튼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일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이라는 협의의 의미를 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민민의 자치와 참여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그 의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너무도 중앙집권적인 우리 사회에서 지방분권적이며,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지역 민주화운동의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여러 영역에서 중앙(서울) 중심의 불균형 발전에 상응하듯 운동 역시 서울 중심, 중앙 중심의 운동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또한 생산력 지상주의-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고-의 폐해가 심각한 재앙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현 시대에 진보라는 개념 자체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 중심의, 참여와 자율의 가치를 강조하는 시민(주민)운동은 소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니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는 비정상적으로 집중화된 개발전략 자체를 대체할 새로운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환경과 노동 친화적 가치가 존중을 받는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아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

다. 또한 계급 중심주의와 같은 이원론적이고 대립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의 가치, 생태적 사고, 대안 공동체 운동 등 소위 '신사회운동'이라 불리는 새로운 운동 양식들도 역시 변화된 상황, 변화된 세대에서 실현되는 민주화운동의 확장과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성혜 gender40@hanmail.net | 본지 편집위원, 인천여성노동자회 지도위원, 주민자치를 여는 인천희망 21 공동대표.